



2021년 주요 개정법률

/ 특허법 /

2021. 8. 17. 개정

✎ 직권보정범위 제한

출원인이 의도하지 않은 보정 발생 방지 위해 직권보정이 신규사항추가이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보정한 경우 무효 간주한다.

구법	현행법
-	<p>66-2① 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u>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u></p> <p>⑥ 직권보정이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사유 추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위해 감면 규정 마련하였다.

구법	현행법
-	<p>83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u>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 특허료 및 수수료 부당감면자 제재 신설

부당감면 사례 예방 위해 부당감면이 발생할 경우 부당감면액의 2배를 징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다른 특허료, 수수료에 대해 감면받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구법	현행법
-	83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심사청구료 반환사유 확대

구법에서는 선행기술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관 심사 전에 출원이 취하·포기된 경우에만 심사청구료가 반환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선행기술조사와 무관하게 심사관 심사 전에 출원이 취하·포기되면 심사청구료 전액 반환되고, 심사 후라도 일정기간 내 출원이 취하·포기되면 심사청구료 1/3 반환된다.

구법	현행법
84①v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나.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뢰된 선행기술의 조사업무에 대한 결과 통지	84①v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나. 삭제

취하기간

민원사유통지 → **반원청구** → **반환**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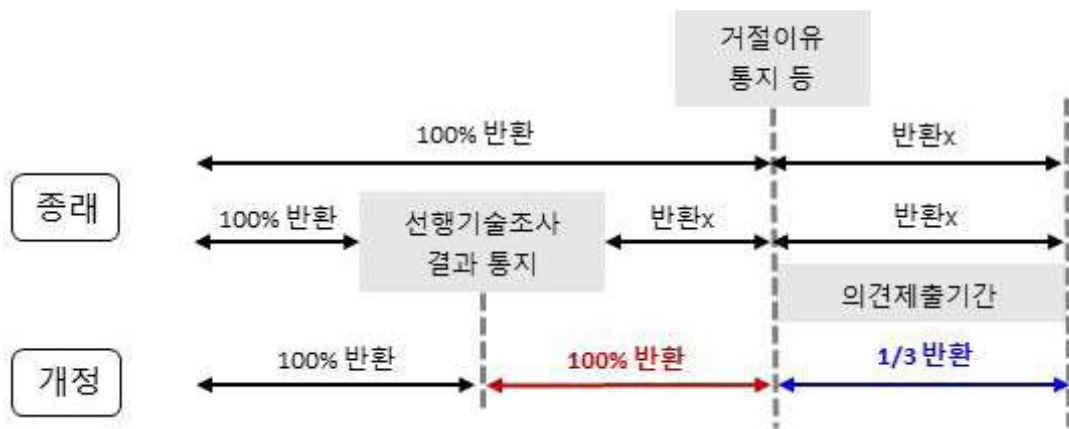
84① v-2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취하
포기

가. 제5호가목에 따른 신고 명령 후 신고 기간 만료 전까지

나. 제5호다목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개정



▶ 심판사건 지원인력 마련

법원에서의 조사관, 재판연구원, 재판연구관 등의 지원인력 운영을 참고하여, 심판원에도 심판 전문성 강화 위해 지원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법	현행법
-	132-16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 심판사건 적시제출주의 도입

구법은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 제출시기에 제한이 없어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의 개선 위해 민사소송법의 적시제출주의 규정을 도입했으며, 심판장이 요구하는 시기보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뒤늦게 주장·증거를 제출하면 심리에 반영되지 않고 각하되어 불이익 받을 수 있다.

구법	현행법
-	158-2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u>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u>

민사소송법 적시제출주의 규정

146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147①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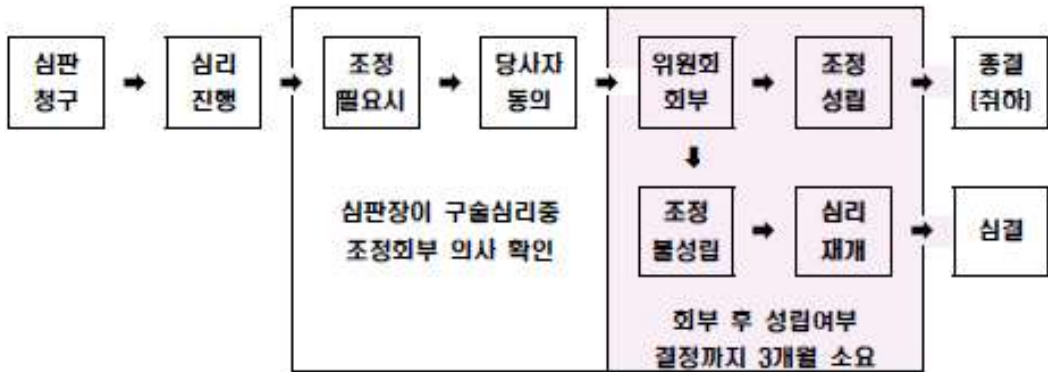
149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심판 위주의 지재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장기간 소요로 중소기업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법에서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의 개선 위해 현행법에서는 심판장이 필요한 경우 심판사건을 양당사자의 동의 얻어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심판사건은 회부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양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신속히 사건 종결될 수 있도록 유도된다.

구법	현행법
-	<p>164-2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p>
-	<p>217①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p> <p>i-2 제164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p>



2021. 10. 21. 개정

▶ 전문심리위원 도입

심판 전문성 강화 위해 기술분야 전문가와 협력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심판장은 심판 중 전문심리위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술분야 별로 모집한 후보자 중 한명 또는 그 이상을 양당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장의 요청에 응해 심판사건 기술내용에 관한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심리위원은 공정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 제척·기피될 수 있으며, 공직자에 준해서 비밀누설죄, 뇌물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법	현행법
-	<p>154-2 ① <u>심판장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u></p> <p>② <u>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u></p> <p>③ <u>전문심리위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u></p> <p>④ <u>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u></p> <p>⑤ <u>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심판장”으로 본다.</u></p> <p>⑥ <u>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전문심리위원”으로 본다.</u></p>
-	<p>226② <u>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	<p>226-2② <u>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뇌물죄.</u></p>

/ 특허법 시행령 /

2021. 6. 22. 개정

▶ 코로나19 관련 발명 우선심사사유 추가

구법	현행법
-	<p>령9② 법 제6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2.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특허법 시행규칙 /

2021. 6. 10. 개정

▶ 반려사유 미비점 보완

구법	현행법
시규11①xx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규11①xx 법 제47조제5항 또는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시명세서

심(출)·조

특허이출원

보·변·심(출)·조

2020년 주요 개정법률

/ 특허법 /

2019. 12. 10. 개정

✚ 컴퓨터 관련 발명 보호 강화

구법은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방법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만을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가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법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에 포함되도록 하되, 이로 인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가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치도록 개정하였다.

구법	현행법
2iii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2iii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	94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 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배타권 제한 - 94(2), 95
 실시권 제한 - 98, 99
 % 법전. 94

2020. 6. 9. 개정

✚ 손해배상청구 금액 상향조정(침해자의 양도수량 전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
 구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이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의 생산능력한도로 제한되어, 침해행위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액이 손해배상액과 같거나 이보다 많을 수 있었다(침해자 이익 ≥ 실제 손해배상액). 즉 적법하게 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손해배상이 적정 수준으로

128① ④
고의 x 3배

128② $[(\text{침양} - \text{공제}) \leq \text{Max}] \times \text{비율}$

④ $(\text{공제} + \text{Max} \text{ 초과} - \text{상당하지}) \times \text{한도}$

한계에서 제외

128④ 침양 x 3배

산정되어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침해자의 모든 양도수량에 대해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게끔 개정하였다.

(구법)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현행법)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 × 합리적 실시료)

128⑤ 한도

구법	현행법
<p>128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p>	<p>128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p>128③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p>	<p>삭제</p>
--	-----------

2020. 10. 20. 개정

- ▶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단 실용신안법은 여전히 친고죄)
 침해죄에 대해 구법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하여 대부분 민사 분쟁만으로 끝났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침해행위를 더 억제하고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여 민사 분쟁과 함께 수사와 공판이 같이 진행되어 침해자를 더 옥죄 수 있게 되었다. 즉 현행법에서는 피해자(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고소기간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특허권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구법	현행법
<p>225② 제1항의 죄는 <u>고소가 없으면</u>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	<p>225② 제1항의 죄는 <u>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u>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

2020. 12. 22. 개정

- ▶ 코로나19 관련 발명 우선심사사유 추가
 우선심사사유에 ‘재난의 대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추가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국가적 재난의 극복과 관련된 발명의 의욕을 한층 더 장려하였다.

구법	현행법
-	<p>61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p> <p>3.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2020. 7. 14. 개정

▶ 특허출원 인정 기탁기관 추가(지정기탁기관)

구법	현행법
<p>령2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출원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미생물을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국내 기탁기관) 2.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국제기탁기관) 	<p>령2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출원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미생물을 기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국내 기탁기관) 2.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국제기탁기관) 3. <u>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에서 미생물 기탁 및 분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지정기탁기관)</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의 당사국이 아닐 것 나. 해당 국가의 특허청장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일한 조건의 절차를 인정하기로 특허청장과 합의한 국가일 것

✓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대상 발명 추가(마약류 의약품)

구법	현행법
<p>령7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p>령7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p>② 제1항 각 호의 발명과 관련하여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산정 및 그 밖에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심사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 Max 5년
- 1만만
- 1억
- 95조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정비

- 외국어 특허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서, 미생물 기탁 증명서류, 우선권 증명서류 등 특허출원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함(통상 실무적으로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쯤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청구일부터 9개월 되는 날까지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규정).
- 재심사와 관련한 기간을 구법에서는 거절결정부터 재심사청구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했으나, 현행법에서는 거절결정부터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

구법	현행법
-	<p>령7-2①아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한 문서(오역정정서)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오역정정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p>
<p>령7-2①과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재심사를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p>	<p>법7-2①하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p>
-	<p>령7-2①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서면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류 등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p> <p>1)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인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p>

Step 1) 연장가급 - **출생** · **심3년** 중 **는**

Step 2) **출생** · **심3년**
개별. 특 **기**

Step 3) · **기간연장신청**
 · **보령서 [의견서]**

출생연기

· **개정**
 ▶ 심판장 자격요건 완화
 · **특**

- 2)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증명서류
- 3)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

구법	현행법
령8③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령8③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020. 3. 30. 개정



임시명세서 제도 도입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때 출원서에 취지표시하면 임시명세서 제출이 가능하다. 임시명세서란 특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형식에 따르지 않고 임의의 형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말한다. 한편 임시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는 특허법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hwp 등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문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 취· 청구범위 유예

임시명세서

제출할 때는 특허법

소프트웨어로

✓

심(심) 조.

임시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 청구범위와 함께 특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형식에 따른 정식명세서를 특허법 제47조에 따른 보정절차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시 출원이 취하 간주된다.

구법	현행법
-	시규21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임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1)을 따라야 한다.
-	시규21⑥ 제5항에 따라 임시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47조에 따라 임시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6조



발명자 추가 등 관련

정당권리자가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 받은 후 특허출원서상의 발명자를 올바르게 정정하고자 할 때는 현실적으로 이전 무권리자 측의 협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인바 별도 확인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발명자의 추가, 삭제, 정정이 가능하게끔 개정하였다.

구법	현행법
-	시규28④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발명자를 추가·삭제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정비

구법	현행법
-	시규54-5iv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인 경우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열목록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1.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
2. 상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한 다음의 파일 확장자를 갖는 파일 형식 - hwp, doc, docx, pdf, ppt, pptx, jpg, tif

ACT출원

보완명령 - 적인·발·청·표·자인/인명

보완명령 - 발·표·3·191·발·구/책

국제출원 보완명령 사유 추가

PCT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출원의 명세서·도면 등이 누락된 경우(특허법 제194조 제1항 제3호와 다른 상황임)뿐만 아니라 잘못 제출된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잘못 제출된 부분의 보완을 명하거나 정정하는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명세서·도면 등의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부분이 제출된 경우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구법	현행법
<p>시규99-2① 특허청장은 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일을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가 누락(법 제1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있는 경우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p>시규99-2① 특허청장은 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일을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부분(정정 부분)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가 누락(법 제1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은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누락된 부분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은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누락된 부분을 적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각 3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적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각 3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⑥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접수일을 법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접수일이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되는 날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현행 동일)</p>
<p>-</p>	<p>시규106-14 ⑤ 심사관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조약규칙 20.5 또는 20.5bis에 따라 명세서, 도면 등의 누락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이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규칙 40bis.1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p>

2019년 주요 개정법률

/ 특허법 /

2019. 1. 8. 개정

- ▶ 보상금청구 금액 및 손해배상청구 금액 상향조정(통상적 실시료를 합리적 실시료로 개정, 고의침해에 대한 징벌적 개념에 따른 손해배상액 증액 제도 신설)

보상금청구(65, 207)		손해배상청구(128)	
구법	현행법	구법	현행법
<p>65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65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128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128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207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p>	<p>207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p>		

<p>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 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u>통상적으로</u>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p>	<p>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 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u>합리적으로</u>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p>		
<p>-</p>	<p>-</p>	<p>-</p>	<p>128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28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p>

		<p><u>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u> 2. <u>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u> 3. <u>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u> 4. <u>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u> 5. <u>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u> 6. <u>침해행위에 따른 벌금</u> 7. <u>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u> 8. <u>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u>
--	--	---

▶ 입증책임 추가 경감 위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신설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의 원고가 주장한 구체적 행위태양을 피고가 부인하는 경우 피고에게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를 부과(특허법 제126조의 2).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제126조의2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국선대리인 제도 신설

특허심판원장은 특정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가능(특허법 제139조의2).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에 대한 수수료 감면 가능.

제139조의2 ①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

2019. 7. 9. 개정

▶ 우선심사사유 정비

특허법(령 9)		실용신안법(령 5)	
구법	현행법	구법	현행법
국가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삭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삭제
-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삭제

▶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의 우선심사사유 대비 정리

특허법(령 9)	실용신안법(령 5)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 특허출원	-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특허출원	-
타법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특허출원(시 규 39)	-

특허법 시행규칙

2019. 6. 10. 개정 (2019. 6. 14. 개정은 의미 없음)

가. 반려사유 신설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시규 11 ①21))

나. 발명자 추가 절차 정비(시규 28)

구법	현행법
<p>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중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그 특허출원의 특허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p>	<p>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중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p>
<p>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제1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제1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 2.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 2.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참고법령문제

절차능력	
본인	대리인
제3조, 제4조, 제5조 ²⁾ ,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12조, 시규 제5조의2(포괄위임이란 것이 있음), 139조의2(심판에서의 국선대리)

01 절차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②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특허취소신청인,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 ③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더라도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④ 특허청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명령한 경우는 그 전에 한 특허에 관한 절차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효로 할 수도 있다.
- 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후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했다면 대표자는 특별수권 없이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 ① 피성년후견인은 불가하다(특허법 제3조 제1항 단서).
- ②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특허권자이므로 비법인사단 등이 될 수 없다(특허법 제4조).
- ③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내자인지가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자라면 특허관리인이 필요하다(특허법 제5조 제1항).

2) Cf) 시규 제11조 제1항 제6호, 제206조, 제220조

- ④ 취사선택 가능하다(특허법 제10조 제4항).
- ⑤ 대표자라도 복수 당사자의 특별수권 없이는 특허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심사기준).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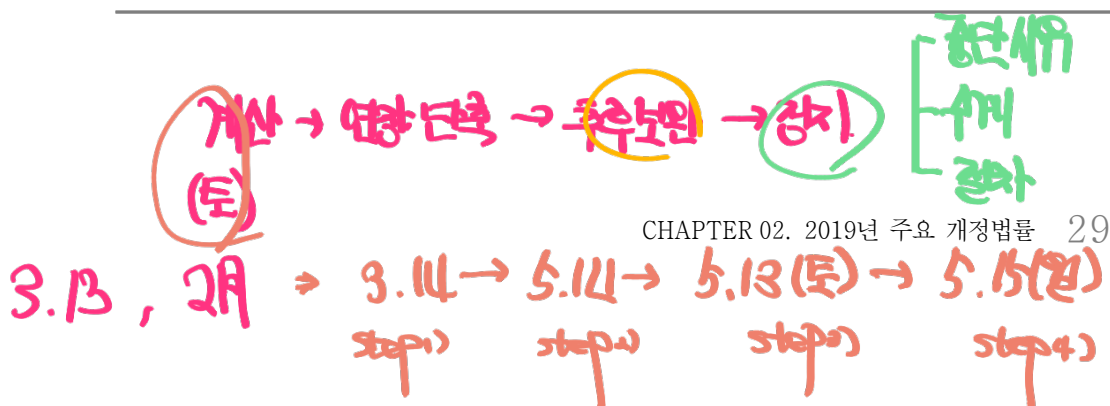
02 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달리 특허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않더라도 특허법 제132조의17 에 따른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③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개별적으로 대리하나, 출원의 취하는 대리인들이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 ④ 본인이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지만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 ⑤ 임의대리인이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 ① 특허관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특허법 제6조 후단).
- ② 특허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 ③ 절차는 개별대리가 원칙이다(특허법 제9조). 이는 특허법 제6조의 특별수권 사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④ 본인의 사망, 행위능력상실로는 임의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특허법 제8조).
- ⑤ 국내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나 선출원이 취하간주될 수 있어서 특별수권이 필요하지, 조약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는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다(특허법 제6조). ②

절차 수속 기간 등

제14조, 제15조, 시규 제11조 제1항 제7호, 제17조(거불심, 재심), 제16조 제2항·제3항(절차무효처분), 제67조의3(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제81조의3 제1항(등록료, 유지료)



03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에 따라 무권리자 특허의 특허무효심결이 2017. 12. 1. 에 확정된 경우는 2017. 12. 30. (토요일) 까지 출원해야만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권리자 출원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② 정당한 사유로 재심사 청구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재심사 청구를 하면 출원은 취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③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과 특허청장 등이 법에 따라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④ 전자문서를 발송했으나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전산 점검으로 인해 기한 내에 전자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기간은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날로 만료한다.
- ⑤ 2017. 10. 31. 에 보전명령을 받은 경우 2017. 11. 30. (목) 까지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 ① 무효심결확정은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초일을 산입해서 30일을 계산하면 2017. 12. 30. 이 되나, 이 날은 토요일이고, 월요일은 1. 1. 공휴일이니, 2018. 1. 2. 까지 출원해도 특허법 제35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특허법 제14조 제4호).
- ②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67조의3 제2항).
- ③ 단축은 청구에 따라 지정기간만 가능하다(특허법 제15조 제2항).
- ④ 사전에 공지한 것은 장애로 보지 않아 구제해주지 않는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
- ⑤ 보전기간인 1달을 계산하면 11. 30. 까지다. ⑤

참고 대표적인 기간

절차의 추후보완기간(특허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67조의3, 제81조의3 제1항)³⁾,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기간(특허법 제34조, 제35조)⁴⁾, 공지의외적용주장기간(특허법 제30조)⁵⁾, 특허청구범위·국어번역문 제출기간(특허법 제42조의2,

3)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 원래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
 4)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결정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특허무효심결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5)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절차의 경우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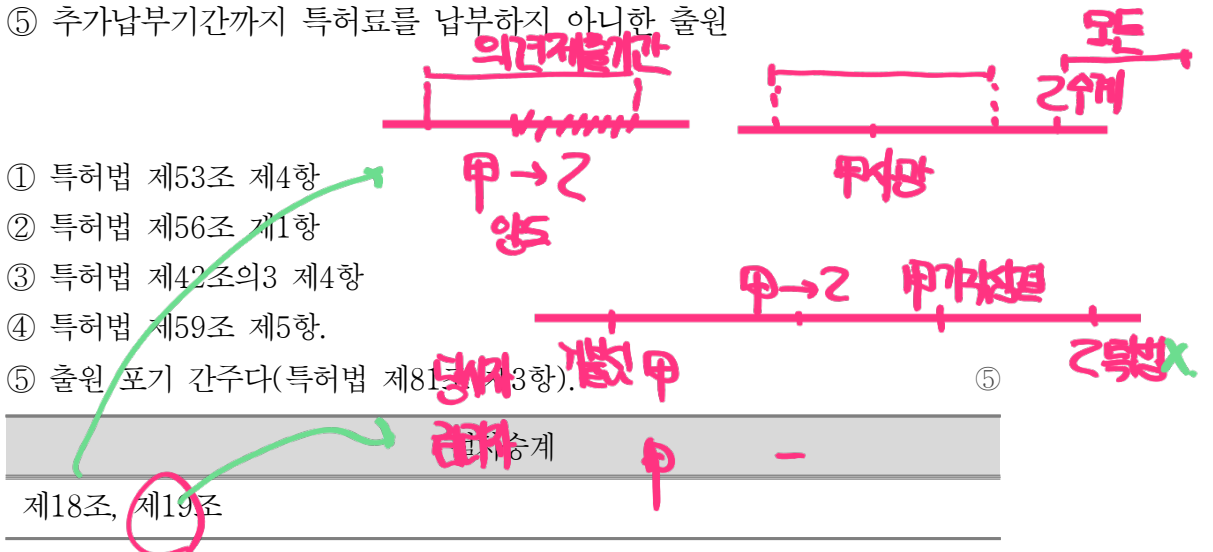
제42조의3)⁶⁾,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기간(특허법 제47조)⁷⁾, 분할출원기간(특허법 제52조)⁸⁾, 변경출원기간(특허법 제53조)⁹⁾, 우선권주장 관련 기간(특허법 제54조¹⁰⁾, 제55조¹¹⁾, 제56조¹²⁾), 심사청구기간(특허법 제59조)¹³⁾, 출원공개시기(특허법 제64조)¹⁴⁾, 재심사청구기간(특허법 제67조의2)¹⁵⁾, 특허료 납부기간(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5항¹⁶⁾, 특허법 제81조¹⁷⁾, 제81조의2¹⁸⁾, 제81조의3 제3항¹⁹⁾), 특허료·수수료 반환청구기간(특허법 제84조)²⁰⁾,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기간(특허법 제90조 제2항²¹⁾, 제92조의3 제2항²²⁾), 특허취소신청기간(특허법 제132조의2)²³⁾,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기간(특허법 제132조의17)²⁴⁾, 국제특허출원의 각종 번역문제출기간(특허법 제201조 제1항, 제204조, 제205조)²⁵⁾, 국제특허출원의 공지예외적용주장 기간 특례(특허법 제200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11조)²⁶⁾,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 특례(특허법 제206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²⁷⁾, 공시송달 효력발생시기(특허법 제219조)²⁸⁾

-
- 6) 우선일부 1년 2개월 이내 + 제3자 심사청구취지를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7) 거절이유통지 받기 전 - 특허결정서 송달하기 전까지
거절이유통지를 1번이라도 받은 이후 -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 재심사 청구할 때
 - 8)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기간 /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특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설정등록일 전까지
 - 9) 최초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10) 최초 출원일부 1년 이내 / 우선일부 1년 4개월 이내 증명서류 제출 / 우선일부 1년 4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보정 또는 추가 가능
 - 11) 최초 출원일부 1년 이내 / 선출원일부 1년 4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보정 또는 추가 가능
 - 12) 출원일부 1년 3개월
 - 13) 출원일부 3년 이내(공지예외 증명서류, 국내우주 선출원, 심사청구, 존속기간, 등록지연기간 계산, 재정청구, 특허여부결정보류신청)
 - 14) 우선일부 1년 6개월 지난 후
 - 15)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16) 특허결정서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 17) 원 납부기간만료일부 6개월 이내
 - 18) 보전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19)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 3개월 이내
 - 20) 통지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21)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존속기간만료 전 6개월 이전
 - 22) 설정등록일부 3개월 이내
 - 23) 설정등록일부 등록공고일 후 6개월 이내
 - 24)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25) 제203조서면(국내서면제출기간)/발명의 설명·청구범위·도면·요약서(국내서면제출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PCT19조·34조(기준일)
 - 26) 기준일부 30일 이내
 - 27) 기준일부 2개월 이내
 - 28)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 후 /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

절차방식	법률이 따른 취하 ²⁹⁾
시규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괄호,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11호 ³⁰⁾ , 제15호, 제16호, 제19호, 제20호 ³¹⁾ , 제46조, 제16조	제42조의2 제3항, 제42조의3 제4항, 제53조 제4항, 제56조 제1항, 제59조 제5항 ³²⁾

04 다음 중 법률에 따라 출원이 취하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 그 원출원
- ② 국내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선출원
- ③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또는 제3차 심사청구취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중 빠른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외국어출원
- ④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출원(정당권리자, 분할, 변경출원 제외)
- ⑤ 추가납부기간까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출원



제18조, 제19조

절차정지		
중단	중지	속행
제20조, 제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78조, 제153조, 제164조 ³³⁾	제24조, 시규 제18조

29) Cf) 권리 포기간주 - 제41조 제5항, 제41조 제6항 / 특허출원 포기간주 - 제81조 제3항
 30) Cf) 제25조나 제33조 제1항 본문과 취급 구별
 31) Cf) 시규 제11조 제3항의 반력요청 이외에 시규 제11조의2 반환신청이라는 것이 있음
 32) Cf) 취하불가 - 제59조 제4항, 제67조의2 제4항, 제56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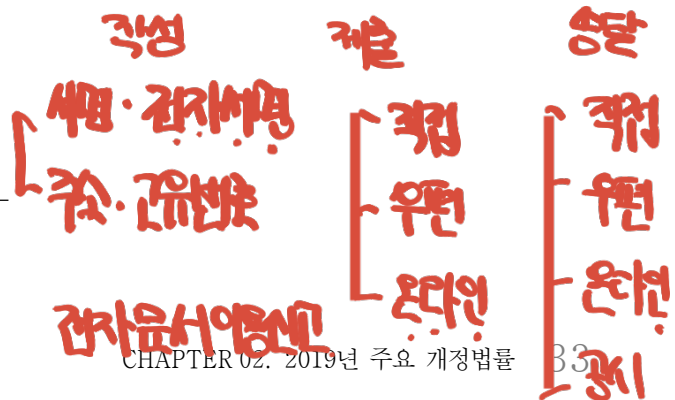
05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절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다.
- ②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때 상속인은 언제나 중단 중인 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경우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당사자는 그 중지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 ④ 임의대리인 없이 직접 심판에 참가하여 절차를 밟고 있는 참가인이 사망한 경우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에게 중단 원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절차 자체가 중단된다.
- ⑤ 특허절차의 진행 중 당사자인 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당해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 ① 임의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특허법 제20조 단서).
- ②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절차 수계를 할 수 없다(특허법 제21조 제1호 단서).
- ③ 특허법 제78조 제3항.
- ④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제155조 제5항, 심판편람).
- ⑤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가 중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20조 제2호).

②

절차진행(서류 제출 및 송달)		
공통	서면	정보통신망
제28조의2	제28조, 제218조, 령 제18조, 제219조, 제220조	제28조의4, 제28조의3, 제28조의5, 시규 제9조의4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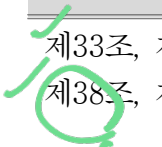
33) Cf) 제139조 제4항, 제155조 제5항

06 서류의 제출 및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제출한 경우 그 우편물의 통시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하면 그 표시된 날에 특허청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② 특허청장은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류를 통지한 경우 통지내용은 통지를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③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는 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았어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 ④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된 때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⑤ 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①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제28조 제2항 단서).
- ②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특허법 제28조의5 제3항).
- ③ 비밀해제되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
- ④ 특허법 시행령 제18조 제11항.
- ⑤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제219조 제3항). ④

특허출원절차		
출원인	서류	SIDE 절차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2조(시규 제21조 ³⁴), 제42조의2 ³⁵ , 제42조의3(시규 제21조의2) ³⁶ , 제43조, 제45조, 시규 제21조의4	제30조, 제34조, 제35조 ³⁷ , 제52조 ³⁸ , 제53조 ³⁹ , 제54조 ⁴⁰ , 제55조, 제56조, 제47조 ⁴¹ , 시규 제28조, 령 제2조, 령 제3조, 령 제4조



비밀해제·공중보안
 ↓
 공개인(특허법 제38조) (5제)
 ↓
 330본反 · 44

자기
(보라)

구출
거출
서취

보·변·변·심(신)고

보·변·변·심(신)고

07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 **첨부**할 수 있다.
- ② 특허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제출된 때에 한하여 출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명세서가 첨부된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된 경우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그 심사청구서를 반려한다.
-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출원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특허출원 후의 양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④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명세서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의 출원을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그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을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 ⑤ 최종 국어번역문에 기재된 사항을 벗어난 명세서의 보정을 한 외국어특허출원이 특허등록된 경우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다.

+ 30A
130A
130B
130C
130D

첨부
심사
보·변·변·심(신)고
전자적 매체
우선권명세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 ① 특허법 제52조 제6항, 제53조 제7항.
- ②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15호.
- ③ 특허법 제38조 제4항.
- ④ 특허법 제54조 제4항 제1호.
- ⑤ 거절이유 동일 뿐,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6호). ⑤

- 34) 임시명세서 제출 가능
- 35) 청구범위 제출 이후 진행가능 - 제59조 제2항 제1호(심사청구), 제64조 제2항 제1호(출원공개)
- 36) 국어번역문 제출 이후 진행가능 - 제47조 제5항(명세서 등 보정), 제52조 제1항 단서(분할), 제53조 제1항 제2호(변경), 제59조 제2항 제2호(심사청구), 제64조 제2항 제2호(출원공개)
- 37) Cf) 시규 제31조, 시규 제33조
- 38) Cf) 시규 제29조 제3항 삭제
- 39) 출원일 소급효 절차 추가 기간 부여 - 제52조 제2항 제2호(의사에 의한 공지), 제52조 제2항 제3호(조약우주), 제52조 제2항 제4호(국내우주), 제52조 제4항(조약우주 증명서류 3개월), 제52조 제5항(번역문 30일), 제52조 제6항(청구범위 30일), 제59조 제3항(심사청구 30일)
- 40) Cf) 시규 제25조 제5항의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 명령 불응시 우선권주장 무효로 할 수 있는 내용 삭제
- 41) 복수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취급 - 제42조의3 제5항, 제7항, 제47조 제4항, 제133조의2 제2항

07-2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중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그 특허출원의 특허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 ② 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발명자를 추가·삭제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출원인이 임시명세서를 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전문 보정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④ 출원인이 임시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할 수 있다.
- ⑤ 임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된 출원은 정규출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조약우선권주장출원 또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할 수 없다.

- ① 이는 구법상의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특허결정 후에도 가능하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② 특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확인서류 첨부 없이도 발명자 추가·삭제 또는 정정이 가능하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 ③ 청구범위 제출유예 하면서 임시명세서로 출원한 경우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또는 제3자 심사청구 취지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중 빠른 날까지 청구범위 제출하면서 동시에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형식에 따른 명세서로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 간주된다(심사기준).
- ④ 임시명세서는 특허청 소프트웨어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로도 제출할 수 있고, 이외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한 파일 형식인 hwp, doc, docx, pdf, ppt, pptx, jpg, tif 로도 제출할 수 있다(심사기준).
- ⑤ 임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된 출원도 명세서의 형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정규출원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조약우선권주장출원 또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할 수 있다(심사기준). ③

42) 출원인 성명·주소(또는 고유번호), 대리인 성명·주소(또는 고유번호), 발명의 명칭, 발명자 성명·주소

43) 청구범위 제출 유예 가능 / 임시명세서 제출 가능

출원절차	<p>주체 : 특허를 받으려는 자(특허법 제42조 제1항)</p> <p>서면 : 출원서⁴²⁾, 명세서⁴³⁾, 필요한 도면, 요약서(특허법 제42조 제1항, 제2항)</p> <p>기간 : 특별히 정해진 기간 없음⁴⁴⁾</p> <p>효과 : 출원일자를 인정 받고 이후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를 받아 특허결정서를 받을 수 있음</p>
임시명세서 절차	<p>주체 : 출원인</p> <p>서면 : 출원서에 취지 기재 / 청구범위 제출유예(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p> <p>기간 : 출원시</p> <p>효과 : 청구범위 적지 않을 수 있고, 발명의 설명도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형식에 따르지 않고 작성 가능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특허청 소프트웨어가 아닌 상용 소프트웨어 이용 가능(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p>
외국어출원 절차	<p>주체 : 출원인(특허법 제42조의3 제1항)</p> <p>서면 : 출원서에 취지 기재(특허법 제42조의3 제1항)</p> <p>기간 : 출원시(특허법 제42조의3 제1항)</p> <p>효과 : 외국어로 명세서, 도면 작성 가능(특허법 제42조의3 제1항)⁴⁵⁾</p>
기탁절차	<p>주체 : 출원인(특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p> <p>서면 : 출원 전에 기탁하고, 출원서에 취지 기재, 명세서에 수탁 번호 기재(특허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조), 증명서류 첨부</p> <p>기간 : 출원시</p> <p>효과 : 기탁참작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판단</p>
공지예외적용 절차 (특발권자에 의한 공지의 경우)	<p>주체 : 출원인</p> <p>서면 : 출원서에 취지 기재, 증명서류 첨부⁴⁶⁾(특허법 제30조 제2항)⁴⁷⁾</p> <p>기간 : 공지 등⁴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출원(특허법 제30조 제1항)</p> <p>효과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특허법 제30조 제1항)</p>
공지예외적용 절차 (특발권자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	<p>주체 : 출원인</p> <p>서면 : ×(문제가 된 경우 의사에 반한 공지 증명)</p> <p>기간 :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출원(특허법 제30조 제1항)</p> <p>효과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특허법 제30조 제1항)</p>



출원인
정당권리자출원절차

<p>정당권리자출원절차</p>	<p>주체 : 정당권리자 서면 : 출원서에 취지 기재, 증명서류 첨부⁴⁹⁾ (특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기간 : 무권리자 출원 후 거절결정확정,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확정, 특허무효심결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출원 (특허법 제34조, 제35조) 효과 : 출원일 소급효</p>
<p>분할출원절차</p>	<p>주체 : 원출원인(특허법 제52조 제1항) 서면 : 출원서에 취지, 원출원 표시(특허법 제52조 제3항) 기간⁵⁰⁾ : 원출원의 보정기간,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⁵¹⁾, 특허결정서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출원(특허법 제52조 제1항) 효과 : 출원일 소급효(예외 있음)(특허법 제52조 제2항)</p>
<p>변경출원절차</p>	<p>주체 : 원출원인(특허법 제53조 제1항) 서면 : 출원서에 취지, 원출원 표시(특허법 제53조 제3항) 기간⁵²⁾ : 원출원 후 최초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0일 전까지 출원⁵³⁾(특허법 제53조 제1항 제1호) 효과 : 출원일 소급효(예외 있음)(특허법 제53조 제2항)</p>
<p>조약우선권주장절차</p>	<p>주체⁵⁴⁾ : 조약 당사국 출원인(특허법 제54조 제1항), 승계인(파리조약 제4조) 서면 : 출원서에 취지, 기초출원 국가명, 기초출원 연월일 기재, 증명서류 첨부⁵⁵⁾(특허법 제54조 제3항, 제4항) 기간 : 기초출원⁵⁶⁾일부터 1년 이내 출원(특허법 제54조 제2항) 효과⁵⁷⁾ : 기초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기초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심사 등을 진행(특허법 제54조 제1항)</p>
<p>국내우선권주장절차</p>	<p>주체 : 선출원인, 선출원 실질적 승계인(특허법 제55조 제1항) 서면 : 출원서에 취지, 선출원 표시(특허법 제55조 제2항) 기간 : 선출원⁵⁸⁾일부터 1년 이내 출원(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효과⁵⁹⁾ :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선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심사 등을 진행(특허법 제55조 제3항, 제4항)</p>

출원인
공.국.조 / +308 308 308 308 308

이중우선권

이중우선권

44) 다만 출원일자가 빠를수록 신규성·진보성·선원·확대된선원 판단시 유리함
45) 명세서 및 도면을 외국어로 작성하더라도 반려되지 않고 출원일자 인정됨
46) 단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가능

조약우선권주 장 보정, 추가절차	주체 : 조약우선권주장을 한 자 ⁶⁰ (특허법 제54조 제7항) 서면 : 보정서(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기간 : 우선일 ⁶¹ 부터 1년 4개월 이내 보정서 제출(특허법 제54조 제7항) 효과 : 조약우선권주장 보정, 추가 ⁶² (특허법 제54조 제7항)
국내우선권 주장 보정, 추가절차	주체 :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자 ⁶³ (특허법 제55조 제7항) 서면 : 보정서(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기간 : 선출원일 ⁶⁴ 부터 1년 4개월 이내 보정서 제출(특허법 제55조 제7항) 효과 : 국내우선권주장 보정, 추가 ⁶⁵ (특허법 제55조 제7항)
명세서, 도면 보정절차	주체 : 출원인(특허법 제47조 제1항) 서면 : 보정서(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기간 ⁶⁶ : 자진보정기간, 일반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거절결정에 따른 재심사 청구시 보정서 제출(특허법 제47조 제1항) 효과 : 명세서, 도면 보정 ⁶⁷
발명자 정정절차	주체 : 출원인 ⁶⁸ 또는 특허권자 ⁶⁹ (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서면 : 보정서 ⁷⁰ 또는 정정발급신청서 ⁷¹ (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기간 : 제한 없음 효과 : 발명자 정정
심사청구 절차	주체 : 누구든지(특허법 제59조 제2항) 서면 : 심사청구서(특허법 제60조 제1항) 기간 : 출원일부터 3년(특허법 제59조 제2항, 제3항) 효과 :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착수(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
우선심사신청 절차	주체 : 누구든지(고시) 서면 :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특허법 시행규칙 제39조) 기간 : 심사청구 후 효과 : 우선심사

최우선권 vs
153A

특허권자 후

제3A vs 출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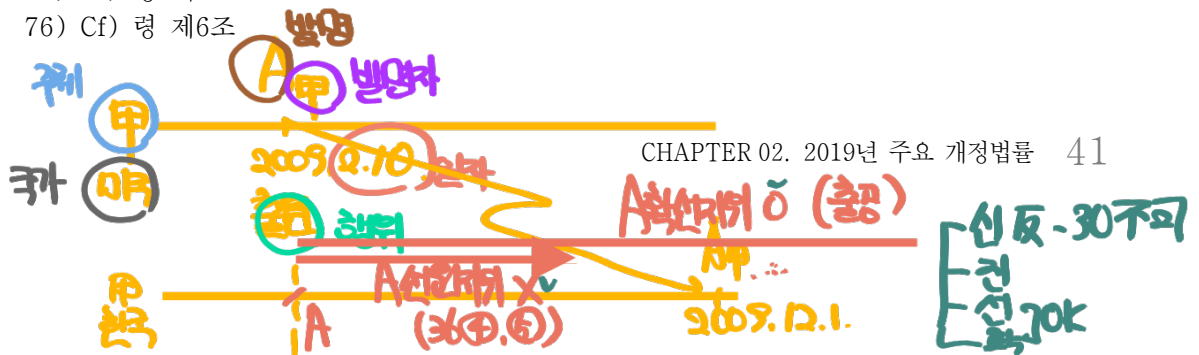
47) 보완수수료 납부 시 보완 가능(특허법 제30조 제3항)
48)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개는 특허권자에 의한 공지로 보지 아니함.
49) 특별히 특허법 제30조 제2항과 같은 증명서류 제출 추가 기간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50) 원출원이 외국어출원인 경우는 국어번역문 제출 후에만 가능(특허법 제52조 제1항 단서)
51) 특허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한 경우는 연장된 기간까지

특허여부결정 보류신청절차	주체 : 출원인(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서면 : 결정보류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기간 : 심사청구 후 출원일부터 6개월(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효과 : 출원일부터 1년 경과 전까지 특허여부결정 보류(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심사유예신청 절차	주체 : 출원인(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서면 : 심사유예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기간 : 심사청구 후 심사청구일부터 9개월(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효과 : 유예희망시점까지 심사유예(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조기공개신청 절차	주체 : 출원인(특허법 제64조 제1항) 서면 : 조기공개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 기간 :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전(출원공개 전) 효과 : 조기공개
재심사청구 절차	주체 : 출원인(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서면 : 보정서, 재심사청구취지 표시(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기간 :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0일(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효과 : 거절결정취소, 재심사(특허법 제67조의2 제3항)

- 52) 원출원이 외국어출원인 경우는 국어번역문 제출 후에만 가능(특허법 제53조 제1항 제2호)
- 53) 특허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한 경우는 연장된 기간까지
- 54) 조약당사국 국민(특허법 제54조 제1항) 또는 조약당사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파리조약 제3조) 중 가능
- 55) 단 증명서류는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 제출 가능(특허법 제54조 제5항)
- 56) 출원일자를 인정받은 정규출원일 것
- 57) 이중우선한 발명은 효과 인정되지 않음(특허법원 2006. 2. 9., 선고, 2004허8749 판결)
- 58) 선출원이 분할·변경출원이 아닐 것, 선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특허여부결정(심결)확정되지 않고 절차 계속 중일 것
- 59) 이중우선한 발명은 효과 인정되지 않음(특허법 제55조 제5항)
- 60) 조약 당사국 출원으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 61)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조약 당사국 출원, 국내 출원 모두 포함하여 이중 가장 빠른 우선일
- 62) 우선권 주장 중에 조약당사국 출원을 추가하는 경우
- 63) 국내 선출원으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 64) 2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국내 선출원 중에서 가장 빠른 출원일
- 65) 우선권 주장 중에 국내 선출원을 추가하는 경우
- 66) 외국어출원인 경우는 국어번역문 제출 후 가능
- 67) 보정각하에 의해 효력 상실될 수 있음(특허법 제51조)
- 68) 설정등록 전에 정정하는 경우
- 69) 설정등록 후에 정정하는 경우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72)73)	무효사유(74)
제62조 제25조, 제33조 제1항 본문, 제33조 제1항 단서, 제44조 제4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4항 제 1호·제2호, 제42조 제8 항 ⁷⁵⁾ , 제45조 ⁷⁶⁾ 제29조, 제36조 제1항부 터 제3항 제32조 조약위반 제47조 제2항 전단, 제 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47조 제2항 후단	제62조의2 (제42조 제3항 제2호, 제42조 제8항, 제45조 제외)	제133조 (제42조 제3항 제2호, 제42조 제8항, 제45조, 제47조 제2항 후단 제외)

- 70) 설정등록 전에 정정하는 경우
- 71) 설정등록 후에 정정하는 경우
- 72) 거절결정불복심판절차에서도 정보제공 가능(제170조 제1항에서 제63조의2 준용)
- 73) 직권재심사사유도 비슷하나 “명백한” 에서 차이가 있음.
- 74) 취소사유는 제29조,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 위반만 해당함.
- 75) Cf) 령 제5조
- 76) Cf) 령 제6조



08 甲은 미국에서 2009년 2월 10일 특허출원한 발명 A를 2009년 12월 1일 우리나라에 특허법 제30조(노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하였고 현재 국내에서 신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乙은 2009년 1월 5일에 간행된 저명한 학술잡지에 甲의 발명 A와 동일한 발명을 발표하였고, 2009년 6월 10일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발명 A를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甲과 乙은 각각 독자적으로 발명 A를 발명한 것으로 본다)

- ① 甲은 적법하게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하였으므로 乙의 국내 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② 甲의 국내출원은 乙의 국내출원보다 출원일이 늦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③ 乙의 국내출원은 출원시 공지에의주장을 수반하고 있어 출원일이 소급되므로 甲의 미국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④ 乙의 국내출원은 적법한 공지에의주장에도 불구하고 甲의 미국출원보다 출원일이 늦어, 미국에서의 발명 A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⑤ 甲과 乙의 국내출원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① 신규성 위반으로 특허 받을 수 없다.
- ② 선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③ 공지에의적용은 출원일 소급효가 없다.
- ④ 갑의 미국출원보다 출원일이 늦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신규성 결여는 선출원 여부와 무관하다. 선출원 여부와 출원공개 여부와 관련 있는 제도는 확대된 선출원주의이다. 따라서 갑의 미국출원보다 출원일이 늦다는 사정만으로 갑의 미국출원에 의해 을의 국내출원의 신규성이 결여되지는 않는다. 신규성은 발명 A의 공개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만약 갑의 미국출원의 출원공개가 을의 출원일보다 먼저인 경우라면 을의 국내 출원이 이로 인해 신규성이 부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 ⑤ 갑 출원은 신규성 위반, 을 출원은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특허 받을 수 없다. 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특허발명(1)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A와 B를 포함하는 의약 조성물 **발명**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C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인용(4/6)** **부가 강조**

제3항 제1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D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제4항 제1항에 있어서, E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제5항 제4항에 있어서, F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제6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G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제7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H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조성물 **명거부**

명거부 (purple arrows pointing to '특징으로 하는' in each item)

나. 특허발명(2)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A'와 B'를 포함하는 조성물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C'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명거부**

확인대상발명(1)

A'와 B'만으로 이루어진 조성물

다. 특허발명(3)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A''와 B''를 포함하는 조성물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C''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명거부**

확인대상발명(2)
 A"와 C"만으로 이루어진 조성물

- ①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1항은 독립항이고,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2항은 청구항 제1항의 종속항이다.
- ②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3항은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 ③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7항은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 ④ 확인대상발명(1)은 특허발명(2)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당연히 특허발명(2)의 청구항 제2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
- ⑤ 확인대상발명(2)는 특허발명(3)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특허발명(3)의 청구항 제2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 ①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②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 ③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 ④ 특허발명 (2) 의 청구항 제2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⑤ 독립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종속항의 권리범위에 당연히 속하지 않는다. ④

심사절차			
심사권	심사토조	절차	심사속도
제57조, 제68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3조의2 ⁷⁷⁾ , 제63조의3	제51조, 제59조 ⁷⁸⁾ , 제60조, 제63조, 제67조의2, 제67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시규 제40조, 시규 제38조, 제61조, 령 제9조, 시규 제40조의2, 시규 제40조의3

77) 특허결정 후에도 직권재심사가 가능하므로 설정등록 등이 되기 전까지 정보제공 가능.
 78) 출원일이 기산일인 대표적인 기간 - 제30조 제2항(출원일부터 30일), 제56조(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제59조 제2항(출원일부터 3년), 제88조 제1항(출원일부터 20년), 제92조의2 제1항(출원일부터 4년), 제107조 제2항(출원일부터 4년), 시규 제40조의2(출원일부터 6개월)

10 심사관의 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심사관이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 요약서에 적힌 사항만 직권 보정한 경우 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낼 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특허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②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했다면, 출원인이 그 사실을 통지 받기 전에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직권재심사가 진행된다.
- ③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라 하더라도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최후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④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에 보정각하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법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면서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에 대해서 보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⑤ 보정에 이른바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사항이 추가된 경우는 그 보정을 각하해야 한다.

- ① 특허법 제66조의2 제4항 단서.
- ② 특허법 제66조의3 제3항.
- ③ 특허결정취소하면서 직권재심사할 때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되는데,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라 할지라도 일반(최초)으로 통지한다(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괄호).
- ④ 특허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⑤ 최후거절이유통지 또는 거절결정서를 받은 후 보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정에 따라 신규사항이 추가된 경우 보정각하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 위반을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해야 한다. ③

	특허법	특허법 취소사유	특허법
거절이유	보정사유 + 각하사유	보정사유	각하사유
취소사유	보정사유 + 각하사유	"	각하사유
취소사유	보정사유 + 각하사유	보정사유 + 각하사유	"
취소사유	"	"	각하사유

1. 사용 - 특허권 + 특허법 제47조 제2항
 2. 예고통지, 단독보정, 신규성

3. 특허심사제 번복 X

출원공개	등록공고	기타
시규 제44조, 제64조, 령 제19조 제3항 출원공개 상반기 번역문 등록	제87조 제3항부터 제5항79), 령 제19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90조 제5항, 제92조 제3항, 제92조의5 제3항, 제136조 제11항, 제219조 제2항, 제221조, 령 제19조, 시규 제55조

비밀취급명령 → **상대방** [**허락**, **허락조건**, **장점**]

11 특허심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②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출원공개 및 등록공고를 보류한다.
- ③ 외국어특허출원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이 아니라, 국어번역문 및 도면으로 출원공개를 한다.
- ④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있으면 연장 기간을 특허공보에 게재한다.
- ⑤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출원공개하지 않는다.

- ① 특허법 제60조 제2항.
- ② 특허법 제64조 제3항, 제87조 제4항.
- ③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 가목
- ④ 특허법 제92조 제3항, 제92조의5 제3항.
- ⑤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단서. ①

특허료	수수료	감면·반환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징수규칙 제8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79) Cf) 등록공고일 관련 - 제132조의2 제1항

12 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납부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특허권자가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법 제79조(특허료)에 따라 납부된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 ③ 특허권자가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심사관은 특허료의 보전명령을 내려야 하며,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 ④ 특허권자가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79조(특허료)에 의한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특허권자가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납부하여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중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① 특허법 제80조 제1항, 제2항
- ② 특허법 제81조 제3항
- ③ 특허법 제81조의2 제2항, 특허청장이 하고, 1월이다.
- ④ 특허법 제81조의3 제3항.
- ⑤ 특허법 제81조의3 제4항. ③

특박권	특허권	질권
제41조	제87조, 제86조, 제85조, 제101조, 제88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19조, 제120조 ⁸⁰⁾ , 제124조, 제125조, 제223조, 제106조	제121조, 제123조

80) Cf) 제101조 제1항 제1호 포기에 의한 소멸 등록 필요

13 동의를 필요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 ③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이전할 수 있다.
- ④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을 수용하는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⑤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 ① 특허법 제100조 제3항.
- ② 특허법 제90조 제3항.
- ③ 특허법 제102조 제3항.
- ④ 특허법 제106조의2 제1항.
- ⑤ 특허법 제119조 제2항.

①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허가 등	등록지연	공통
제89조, 령 제7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2조의2, 령 제7조의2, 제92조의3, 제92조의4, 제92조의5,	제93조

14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재심사 청구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해당한다.
- ②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한 차례만 5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 ④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의 효력은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만 제한적으로 미친다.
- ⑤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① 이는 구법의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해당한다(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하목).
- ② 특허법 제89조 제1항
- ③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 ④ 특허법 제95조
- ⑤ 특허법 제92조의5 제2항 ①

실시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일반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18조	발진법 제10조 제1항, 제81조의3 제5항, 제103조, 제103조의2, 제104조, 제105조,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5조, 제98조, 제138조, 제125조의2

15 통상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의한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특허가 무권리자 특허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후 등록은 하지 않고 국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한 자는 실시한 발명 및 사업목적 범위에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② 질권설정 이전에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었던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이전 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 ③ 특허발명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특히 있는 경우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았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후 특허취소심판에 대한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을 실시한 자는 재심에 의해 취소된 특허권이 회복되더라도 실시한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⑤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대가의 최초 지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정의 효력을 잃는다.
-
- ① 특허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무권리자 특허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특허법 제118조 제2항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대항요건을 갖추는 법정실시권을 취득한 자가 아닌 이상, 해당 특허의 등록 원부에 통상실시권을 등록해서 대항요건을 갖추었어야만 해당 특허가 정당권리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법정실시권을 가질 수 있다(특허법 제103조의2 제1항 제2호).
 - ② 질권행사에 따른 법정실시권은 유상이다(특허법 제122조).
 - ③ 특허법 제107조 제1항 단서.
 - ④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법정실시권은 무상이다(특허법 제182조).
 - ⑤ 특허법 제113조.

①

특박권 침해	특허권 침해
제65조 ⁸¹⁾ , 제207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94조, 제97조, 제96조, 제81조의3 제4항, 제181조, 제2조, 제127조, 제126조, 제126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225조, 제231조

16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법원으로부터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 받은 때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③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항상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특허발명의 실시가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 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또한 청구할 수 있다.

- ① 구법에서는 친고죄였으나 현행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다(특허법 제225조 제2항).
- ② 자료의 소지자가 제출 명령 받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는다(특허법 제132조 제1항 단서, 제3항).
- ③ 항상이 아니고,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그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또한 그 자료로 증명할 사

81) Cf) 제65조에서 제126조, 제126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제130조, 제131조 준용 ×

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법원이 위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132조 제5항).

- ④ 방법발명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는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효력은 악의의 청약행위로만 제한된다(특허법 제94조 제2항).
- ⑤ 침해금지청구에 부대해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 제2항). ③

16-2 甲은 2016년 1월 1일 설정등록된 특허발명 X의 특허권자이고, 乙은 甲의 허락 없이 2016년 1월 1일부터 甲의 특허제품과 동일한 제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함)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甲은 자신의 특허제품을 2016년에 0개, 2017년에 1,000개, 2018년에 1,500개를 판매하였고, 乙은 침해제품을 2016년에 2,000개, 2017년에 2,500개, 2018년에 3,000개를 판매하였다(특허제품 및 침해제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은 모두 1,000원임). 甲은 2016년 12월말까지 공장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특허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고, 공장 완공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었다. 특허발명 X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당 200원에 판매수량을 곱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甲은 2016년에 특허발명 X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없었으므로, 그 기간 중 乙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2항에 따른 경우 甲이 2018년에 乙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특허제품 500개를 판매하지 못하였다면 乙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甲의 2018년 중 입은 손해액은 500,000원이다.
- ③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경우 乙이 2017년에 판매한 침해제품의 양도수량(2,500개) 중 甲이 2017년에 생산하여 판매한 특허제품의 양도수량(1,000개)을 뺀 수량(1,500개)에 乙의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특허권자 甲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1,000원)을 곱하여 얻어진 금액(1,500,000원)을 甲이 2017년 중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④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른 경우 2,500,000원을 甲이 2017년 중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⑤ 甲이 2017년 중 乙의 침해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으로 500,000원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법원은 500,000원으로 감액해야 한다.

① 특허법 제128조에 따르면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금액; 또는 제8항에 따른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8조 제5항).

②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자 양도수량 전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text{침해자 양도수량} - \text{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 불가 수량}) \leq (\text{Max, 특·전 생산 가능 수량} - \text{판매 수량}) \} \times \text{특·전 이익액}] + [(\text{Max 초과 수량} + \text{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 불가 수량} - \text{실시권 설정 불가 수량}) \times \text{합리적 실시료}] = [\{ (3,000\text{개} - 500\text{개}) \leq (2,000\text{개} - 1,500\text{개}) \} \times 1,000\text{원}] + \{ (2,000\text{개} + 500\text{개} - 0) \} \times 200\text{원} = 1,000,000\text{원}$$

③ $[\{ (2,500\text{개} - 0\text{개}) \leq (2,000\text{개} - 1,000\text{개}) \} \times 1000\text{원}] + [(1,500\text{개} - 0\text{개}) \times 200\text{원}] = 1,300,000\text{원}$

④ $2,500\text{개} \times 1,000\text{원} = 2,500,000\text{원}$

⑤ 손해액이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초과액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특허법 제128조 제6항).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른 금액은 최저 법정배상액이며, 특허법 제128조 제6항에서 감액할 수 있는 금액 범위는 제5항에 따른 금액 초과액에 대해서이다. ④

심판		
일반	사건	재심
심판관(제132조의16,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3조의2) 국선대리인(제139조의2)	제132조의2 - 15 제132조의17,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6조 제136조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4조 제13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4조, 제185조

심판청구방식(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 제142조) 전문심리위원(제154조의2) 심판절차(제147조, 제154조, 제158조, 제158조의2, 제159조, 제160조, 제162조, 제165조, 제166조 ⁸²⁾ ,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조정(제164조의2) 취하 및 심결의 효력(제161조, 제163조)	제135조 제138조	
--	----------------	--

	특허취소신청	특허무효심판
제도 취지	특허권의 조기 안정화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절차	결정계 절차 (특허청과 특허권자)	당사자계 절차 (심판청구인과 특허권자)
청구인 적격	누구나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신청/청구 기간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권리 소멸 후에는 불가)	설정등록 후 언제나(권리 소멸 후에도 가능)
취하	청구항 별로 가능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 (취소이유 통지 후에는 불가능)	청구항 별로 가능 심결이 확정되기 전(답변서 제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 필요)
취소/무효이유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선원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모인출원, 공동출원 위반, 권리항유위반, 조약위반 등
심리방식	서면심리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

82) Cf) 제125조의2

복수 사건의 심리	원칙 병합 심리	원칙 사건별 심리
결정/심결	취소결정(취소결정 전에 취소이유통지),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	무효심결, 기각심결 또는 각하심결
불복 소제기	취소결정, 신청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특허법원에 불복 기각결정, 합의체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불가	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특허법원에 불복 청구인 및 피청구인 모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특허법원에 제소 가능

17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특허취소결정에 대해서는 특허권자가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나 특허취소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③ 특허취소신청은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으나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 ④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할 뿐 구술심리는 하지 않는다.

- ①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 ② 특허법 제132조의13 제5항.
- ③ 특허법 제132조의12 제1항.
- ④ 특허법 제132조의9 제1항.
- ⑤ 특허법 제132조의8 제1항.

①

소송		
특허법원	행정심판·행정법원	대가 등 (행정심판·행정법원 또는 민사법원)
제186조 ⁸³⁾ , 제187조 ⁸⁴⁾ , 제188조, 제189조, 제188조의2, 제191조의2	제115조, 제224조의2 ⁸⁵⁾	제115조, 제186조 제7 항, 제190조, 제191조

18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 심판청구서,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②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서 정한 대가의 심결 및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각하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는 심판청구인이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한다.
- ④ 특허법원은 특허무효심판의 기각심결에 대한 취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결을 취소할 수 있을 뿐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없다.
- ⑤ 심판의 당사자, 참가인뿐 아니라 심판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① 특허법 제186조 제1항.
- ② 특허법 제186조 제7항.
- ③ 당사자계 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는 진자가 이간자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다(특허법 제187조).
- ④ 특허법 제189조 제1항.
- ⑤ 특허법 제186조 제2항 제3호. ③

83) Cf)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대가, 제165조 제1항의 심판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특허법원에 불복 불가

84) 당사자계 심판의 심결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85) Cf) 제78조 제3항, 제152조 제4항, 제156조 제5항, 제132조의6 제2항, 제132조의13 제5항 불복 불가 / 제224조의3 제5항도 불복 불가

보칙	벌칙
제215조 ⁸⁶⁾ , 제215조의2 ⁸⁷⁾ , 제216조 ⁸⁸⁾ , 제217조, 제217조의2, 제222조, 제224조의3, 제224조의4, 제224조의5	제224조, 제225조부터 제232조

19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침해죄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이 허위표시의 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나, 법인이 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국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법 제22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특허취소신청 사건에서 위증을 한 증인이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했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① 특허법 제231조 제1항.
- ② 특허법 제230조 제2호.
- ③ 구법상의 벌금형이다. 개정법에서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했다(특허법 제229조).
- ④ 국내외에서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죄가 성립한다(특허법 제229조의2 제1항).
- ⑤ 특허법 제227조 제2항. ③

86) Cf) 제119조 제1항이 규정되어 있어 청구항별로 포기 가능하다는 점 숙지
 87) Cf) 시규 제19조 절차 포기 또는 취하는 절차 계속 중이면 임의의 시점에서 가능 / 청구항별 포기는 특허료 납부시에만 가능(시규 제19조의2) / 청구항별 취하는 불가(判例)
 88) Cf)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등록공고 아님) 이후 열람 가능할 수 있음

직위 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비밀누설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PCT		
수리절차 (대한민국 수리관청)	국제절차	국내절차 (대한민국 지정관청)
제192조 ⁸⁹⁾ , 제197조 ⁹⁰⁾ , 제193조 ⁹¹⁾ , 제194조 ⁹²⁾⁹³⁾ , 제195조 ⁹⁴⁾ , 제196조 ⁹⁵⁾ , 제198조	시규 제106조의7 제1항 ⁹⁶⁾ 제198조의2, 시규 제106조의11 제5항, 시규 제106조의14 제1항, 시규 제106조의19 시규 제106조의26, 시규 제106조의39, 시규 제106조의41,	제199조, 제200조 ⁹⁷⁾ , 제200조의2, 제203조, 제201조, 제204조, 제205조, 제202조, 제206조 ⁹⁸⁾ , 제207조(기준일 도과하여 공개할 국어번역문 확정된 경우 + 국제공개된 이후 + 우선일부터 1년 6개월 이후), 제208조(수·번·기), 제209조(수·번), 제210조(수·번 / 국내서면제출기간 지난 후), 제211조, 제214조 ⁹⁹⁾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대상	모든 국제출원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
연락권	없음	있음
보정	국제조사보고서 수령 후 소정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개

- 89) Cf) 시규 제90조
90) Cf) 시규 제106조의4
91) Cf) 언어 - 시규 제91조, 계약국 지정 - 시규 제93조의2[모든 계약국 자동 지정, 국내우선권 선출원 취하 회피 위해 계약국 지정 제외 가능(시규 제93조의2 제2항)]
92) Cf) 시규 제99조의2 보완 지정기간 2개월
93) Cf) 시규 제99조 제1항, 통지일부터 2개월
94) Cf) 시규 제101조
95) Cf) 시규 제106조, 보정 명한 날부터 1개월,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96) 우선일부터 2년 6개월 또는 기준일 중 빠른 날 전까지
97) Cf) 시규 제111조, 기준일 경과후 30일
98) Cf) 시규 제116조, 기준일부터 2개월
99) Cf) 시규 제117조,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

	기간 내	시 전
단일성 결여	추가수수료 지불요구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 지불요구
이용가능자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2장 규정에 구속된 계약국 거주자 또는 국민이 그러한 계약국 또는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수리관청에 국제출원 한 경우만 적용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조사기관과 출원인간의 의견교환- 원칙적 불허용 2. 보정 불허용 3. 불리한 보고 작성 전에 예고 받을 권리 없음 4. 단일성 불인정 경우에 추가 수수료 납부 5. 절차의 종료 - 보고서 또는 부작성선언서 및 견해서 작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 관리함 2. 보정 허용 3. 불리한 보고 작성 전에 예고 받을 권리 있음 4. 단일성 불인정 경우에 추가 수수료 납부 또는 청구범위 감축 5. 절차의 종료 - 보고서 작성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 사유(시규 제106조의11 제5항)

<p>국제출원의 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과학 또는 수학의 이론</p> <p>나. 단순히 발견한 동물·식물의 변종</p> <p>다. 사업활동,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p> <p>라.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의 처치방법 및 진단방법</p> <p>마. 정보의 단순한 제시</p> <p>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없는 컴퓨터프로그램</p>	<p>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p>
--	--

	PCT 19조 보정	PCT 34조 보정
주체	국제조사보고서 받은 출원인	국제예비심사 청구한 출원인
시기	국제조사보고서 송달일부터 2월 또는 우선일부터 16월 중 늦은날까지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시까지

제출처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하여
횟수	1회	횟수 제한 없음
보정대상	청구범위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
보정범위	출원 시 국제출원의 범위	출원 시 국제출원의 범위

국제공개예외 - PCT21(5) 국제공개 전 국제출원 취하, PCT21(6) 공서양속에 반하는 부분, PCT64(3) 국제공개 필요 없다고 선언한 국가만 지정한 경우

20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미국특허청에 2008년 5월 6일 특허출원 A를 하고 특허출원 A를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해 2009년 3월 3일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영어로 국제출원 B를 하고 2010년 3월 3일 한국특허청에 국제출원 B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한국특허청에서는 국제출원 B를 2009년 3월 3일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 ②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의 범위, 도면 등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그 번역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국제특허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
- ③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 보정을 한 때에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해서만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면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보정한 청구의 범위가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의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로 인정된다.
- ④ 국내서면제출기간내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발명의 설명 및 청구의 범위에 대한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⑤ 미국특허청에 특허협력조약에 의해 영어로 국제출원을 한 후 한국특허청에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에서 규정한 번역문을 제출하고 특허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제3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그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특허법 제199조 제1항.
- ② 일종의 삭제보정이며(특허법 제201조 제5항), 삭제보정은 하자가 아니다.
- ③ PCT19조 보정 후의 청구범위로 번역문의 제출이 가능할 뿐이고, 최초 명세서 및 도면은 국제출원일 당시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이다.
- ④ 취하간주된다(특허법 제201조 제4항).
- ⑤ 제3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경과 후에만 심사청구가 가능하다(특허법 제210조 제2호). ①

21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안과 디자인은 모두 물품의 형상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 사이에서는 선원주의가 적용되므로 동일한 물품의 형상에 대해 같은 날에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정해진 어느 하나의 출원만이 등록될 수 있다.
-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안마기장치에 관한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한 후 이를 특허출원이 아닌 실용신안등록으로 출원하면서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분할출원의 경우는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 ⑤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더라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① 선원주의는 특허와 실용신안 상호간에만 적용되며, 실용신안과 디자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실용신안법 제7조 제3항).
- ② 실용신안법 제22조의2.
- ③ 특허법 제55조 준용(실용신안법 제11조).
- ④ 실용신안법 제12조 제2항, 제3항. 특허와 동일하다.
- ⑤ 실용신안법 제6조.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대상	발명 (물건, 방법, 제조방법 카테고리 포함) (특허법제2조3호)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물품성 수반하는 협의의 물건 카테고리만 해당) (실용신안법제4조1항)
성립 요건	고도성 要 (특허법제2조1호→특허법제29조 제2항에서 평가)	고도성 不要 (실용신안법제2조1호→실용신안법제4조제2항의 문구가 특허법제29조제2항과 상이)

진보성	쉽게 (특허법제29조2항)	극히 쉽게 (실용신안법제4조2항)
부등록 사유	공서양속 문란, 공중의 위생 해할 염려 있는 발명 (특허법제32조)	공서양속 문란, 공중의 위생 해할 염려 있는 발명 +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 고안 (실용신안법제6조)
도면 첨부 要不	필요한 경우만 (특허법제42조2항)	필수 / 미제출시 반려 (실용신안법제8조2항 /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
우선 심사 대상의 상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3.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 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4.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 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5.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특허출원 (특허법시행령제9조) 6. 타법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특허출원 (특허법시행규칙제39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시행령제5조)
존속 기간	설정등록이 있는날부터 특허출원일 후20년 (특허법제88조1항)	설정등록이 있는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10년 (실용신안법제22조1항)
존속 기간 연장 제도	허가 등(특허법제89조) & 등록지연(특허법제92조의2)	등록지연(실용신안법제22조의2)

효력 제한	1. 연구, 시험 2. 국내통과 3. 특허출원시 물건 4. 약사법상 조제 (특허법제96조)	1. 연구, 시험 2. 국내통과 3. 특허출원시 물건 (실용신안법제24조)
간접 침해	물건, 방법 모두 규정 有 (특허법제127조)	방법/물질에 관한 규정은 無 (실용신안법제29조)
생산 방법 추정 규정	有 (특허법제129조)	無
PCT (도면 제출)	-	실용신안법 제36조(도면 제출) ①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 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 우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 청장에게 제출 ② 도면 미제출시 또는 도면의 국 어번역문의 미제출시 특허청장은 제출명령 可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제출시 그 국제실용 신안등록출원을 무효 可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출된 도면 및 도면의 국어 번역문은 특허법 47조의 보정으 로 취급. 단, 「특허법」 제47조제1 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미 적용.
침해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 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허법 제225조 제2항)	친고죄,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 기할 수 없다 (실용신안법 제45조 제2항)

물수	<p>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u>선고하여야 한다</u>(특허법 제 231조)</p>	<p>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u>선고할 수 있다</u>(실용신안법 제 51조)</p>
----	--	---

2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TRIPs 협정이라고 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TRIPs 협정은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이러한 제외는 그 발명의 이용이 그 나라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② 특허의 보호기간을 출원일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종료되도록 규정 하더라도 TRIPs 협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③ TRIPs 협정은 자기나라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④ TRIPs 협정에서 규정하는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발명의 사용을 허용하는 강제실시권은 동 사용을 향유하고 있는 기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 가능하다.
- ⑤ TRIPs 협정은 특허된 제법에 의해 취득된 물질이 신규인 경우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제3자가 동일 물질을 생산했다면 특허된 제법에 의해 생산한 것으로 본다.

- ① TRIPs 제27조 2.
- ② 출원일부터 20년은 넘어야 한다(TRIPs 제33조).
- ③ TRIPs 제3조, 제4조. TRIPs 제4조를 보면 가. 나. 다.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혜국대우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 지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라는 표현을 삽입했다.
- ④ TRIPs 제31조 마.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전이 가능하다. 특허법 제102조 제3항과 비슷한 내용이다.
- ⑤ TRIPs 제34조. 특허법 제129조의 생산방법추정규정과 비슷한 내용이다.

②